

COVID-19 확산에 따른 전파정책 동향 및 시사점

배영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eodp88@kca.kr

Radio wave policy trends and implications following the spread of COVID-19

Young-Ho Bae

Korea Communications Agency

I. 서론

최근 COVID-19(이하 코로나19)의 빠르고 광범위한 확산으로 인한 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국가 정책, 국가 기반 산업, 나아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해외 주요국의 전파정책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전파정책의 방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미국의 경우에는 미 의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원조, 구호 및 경제 안보법(CARES)’을 제정하여 의료서비스 업체가 광대역 통신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통신과 관련된 장비 구매 지원으로 신속 대응이 가능한 의료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며, 코로나19 대응 기간 동안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농촌 가정을 대상으로 끊임없는 무선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20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농촌 5G 펀드(5G Fund for Rural America)를 설립하여 농촌지역 5G 서비스 구축 지원을 위해 최대 90억 달러 투자를 추진 중이다.

영국의 방송통신규제위원회(Ofcom)는 코로나19 대응 기간 동안 영국인들의 TV시청, 모바일 데이터 소비 패턴 등 전파이용 패턴 등을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인해 “집에 머물기(Stay Home)” 장려 등으로 통신사업자들의 네트워크 부하가 가중됨에 따라 유무선통신의 탄력성을 증진시키고 원활한 재난안전통신시스템 운영을 위해 액세스 우선 순위 분류·결정 등 개인, 가족,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호주에서는 방송통신규제기관(ACMA)의 주도로 코로나19 대응 기간 동안 정부와 통신사가 적극 협력하여 국민들을 연결시키는 주요 수단인 무선통신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추진 중이다. 모뎀 개선, 네트워크 수용량 확보, 데이터 접근성 확대 지원, 추가 인력 고용 지원 등 무선통신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대국민 무선통신 서비스의 신뢰성·연결성·지속성이 유지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면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는 자연재해, 전염병 창궐 등으로 인한 범국가적 응급 상황 시 전파 정책 수립 절차 등이 포함된 국가비상통신계획(NETPs)을 발표

하였다. 이 지침은 국가재난관리, 통신/ICT 규제 및 규칙, 국제적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통신 장비 및 인력 운용의 자금을 지원하고 비상 통신 수단을 유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해외 주요국 전파정책 현황〉

구분	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ES법을 제정하여 의료서비스 제공업체의 통신서비스 구축 지원 ○ 농촌 가정의 무선통신서비스 지원을 위해 20억 달러 투자 ○ 농촌 5G 서비스 구축 지원을 위해 최대 90억 달러 투자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가족,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 지원(Ofcom) -국민의 전파이용 패턴 등을 조사·분석하고 원활한 이용을 위한 분야별 맞춤 지원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하여 무선통신 분야에 적극 투자 지원(AMCA)

코로나19 대응의 선두주자이자, 국제 사회의 호평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ICT 지원 긴급대응 조직인 코로나19 대응과를 설치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ICT 관련 대응 등을 지원하고 있고, 코로나19 항체진단기업 기술 지원을 비롯해 2020년 생계형 무선국 등 검사수수료 전액 감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징수료 감면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파정책을 추진 중이다.

III. 결론

해외 주요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파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국민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범국가적 필수 요소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경제기구의 전망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전파이용 고도화 및 제도 유효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 [1] “ITU Guidelines for national emergency telecommunication plans” ITU
- [2] 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USA